

2017년 객관식 소방공무원법 정오표(2017.7.3.)

페이지(p)	오(수정 전)	정(수정 후)
141p 26번 해설 143p 31번 해설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174p 4번 해설 G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175p 4번 문제	소방위 계급의	소방경 계급의
175p 4번 문제 해설	A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① 소방정 이하 소방위 이상 ② 소방장 이하	A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① 소방정 이하 소방경 이상 ② 소방위 이하
204p 84번 G 및 해설	100분의 20	100분의 30
214p 112번 B 및 해설	100분의 20	100분의 30
259p 112번 A,B,G,M	이상의	이하의
276p 24번, 25번 해설 277p 27번 해설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281p 40번 해설 대체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경 이하의 징계사건은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이다(개정, 2017.6.2.).
281p 40번 정답	B	G
282p 42번 문제 M	소속 소방위 이하	소속 소방경 이하
310p 115번 G 및 116번 A	위원의 보충임용을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310p 115번 해설 M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311p 119번 문제	기계부가금	징계부가금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 2017.5.2.] [대통령령 제28007호, 2017.5.2.]

1. 개정 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대상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 확대(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휴직기간 중 최초의 1년까지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추가(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승진임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할 수 없도록 함.

3)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수 범위 확대(제6조의2제4항)

종전에는 해당 기관의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중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를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7.1.] [총리령 제1394호, 2017.5.1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서 승진할 때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과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반영기간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로 하던 것을,

2) 앞으로는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와 동일하게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평정점을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도록 반영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징계령 [시행 2017.6.2.] [대통령령 제28100호, 2017.6.2.]

1. 개정 이유

- 1)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대한 관할을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이관하고,
- 2)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도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1) 징계위원회의 관할(소방공무원 징계령 제2조)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2) 징계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5조)
 -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의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6.2.>
 -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심의 대상자에 관한 안전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⑥ 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